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 대한 허와 실



산업내 한 부분의 희생을 발판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부분은 해당 피해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의미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개시와 그 어느 때보다 국내 농업경시세력의 농업죽이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 FTA) 논의를 필두로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가 관련 업계와 부화뇌동하고 있는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요지를 요약하면 “국내 농업 문제는 심각하기는 하나 전체 국익 차원에서 농업의 희생을 감내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FTA 미체결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식이다. 특히 올해 초 우리와 같은 처지이던 일본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것을 빌미로 더욱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농연에서는 국민적 합의와 국익차원의

세밀한 득실 분석이 배제된 채 일방적인 농업 희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특정 세력들의 FTA 논의에 대한 허와 실을 살펴보고 한농연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 현재 거론되는 FTA 체결 대상 국가

현재 진행중인 FTA 논의가 농업계와 비농업계의 입장과 이익을 모두 고려한 것이 아닌 일방적이고,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해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대기업 154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우선 협정 체결 대상국은 미국, 동남아, 일본, 중남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입장에서야 국내 농업과 농민들의 안위에는 별 관심이 없겠지만 이러한 조사 결과는 공교롭게도 국내 농산물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농산물 수출국들을 우선 대상국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과 강한 재력과 로비력을 갖춘 대기업에 의해 대외개방정책이 일방적으로 주도되고 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칠레와 주요 대상국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본, 미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한·칠레

칠레와의 FTA 논의는 지난 98년부터 칠레를 협정 대상국으로 정하고, 4차례의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협상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 이유로 정부 일각에서나 비농업계에서는 국내 농민들의 조직적인 반발 때문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주된 이유는 바로 FTA 체결의 기본 전제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FTA는 협정 대상국 간 산업별로 상호보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 점에서 칠레는 농업분야의 경우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고, 공산품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실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칠레와의 FTA 추진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2월 중에 양국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한·미

FTA 체결 대상국으로 거론되고 있는 미국은 대다수 국내 대기업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협정 대상국으로, 협정이 체결된다면 국내 공산품의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지만 반면 국내 농업 분야와의 상호보완성이 거의 없어 국내 농업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아직까지 칠레나 일본에 비해 진척이 더딘 상황이지만 무역협회와 전경련을 앞세운 국내 대기업들의 집요한 공략(?)이 계속될 전망이다.

■ 한·일

현재 거론 중인 국가들 중에서 일본은 그나마 협정 체결의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국내 산업과의 상호보완성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협정 체결 역시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출범했던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은 최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FTA 체결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분야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

며, 이런 산업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비교 열위에 있는 업종과 제품의 산업기반이 와해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국내에서도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3. 자유무역협정 논의의 문제점

농업의 무한한 공익적 가치 철저히 무시

우리 농업은 영세소농 규모로서 쌀농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과수, 채소 및 축산을 겸영하는 복합영농을 통해 농가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FTA 협정 체결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득실에만 근거하여 경제적 가치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농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의 공익적 기능

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산품을 생산하는 소수 대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다수 농민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의 증진이라는 국정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우리 농업은 UR협상에서 합의된 농업보조금 감축 약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벅찬 상황이다.

우리 경제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국가간 협정이나 협상은 양측이 서로 이득을 보게 될 때 맺어진다. 자국의 열악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 선진국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우리와 유사한 여건을 가진 일본 역시 높은 토지비용과 인건비 때문에 농업 분야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FTA를 체결할 경우 UR협상의 결과에 따른 무역정책의 일반적인 틀이 붕괴되어 농

▶ 현재 논의되고 있는 FTA 협정 체결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득실에만 근거하여 경제적 가치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농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은 지난 3월 5일 개최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농민대표자대회에 참가한 경기도연합회 회원들.



업부문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지하고, FTA 체결을 제외해 온 나라들에 대해 자국내 농업보호 차원에서 농업을 제외하면 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기해 왔다. 바로 이런 이유로 경제대국인 일본이 2002년에 와서야, 그것도 농업부문을 상당 부문 제외한 상태에서 싱가포르와 FTA 체결을 하게 된 배경인 것이다.

결국 국익차원에서도 별 도움이 없는 것으로 각종 연구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도 칠레와의 FTA를 계속 강행하려는 현 정권의 속셈은 무엇일까? 국가 원수간 약속 때문인가? 아니면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국내 농업의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일부 대기업의 불확실한 이익을 건져보자는 '소탐대실의 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인가?

농업계는 무조건 개방정책을 반대하나?

우리 농민들은 무조건적으로 대외개방정책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고도화되고 국경조차 무의미해진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외톨이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도 원하지는 않는다. 이미 우리의 농산물 시장은 쌀과 쇠고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개방되어 수입자유화율이 99%를 넘고 있으며 이는 공산품의 수입자유화율 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의 자동차시장에서 차지하는 외제차의 비중도 2%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 때 결코 농업부문의 국수주의적인 수입개방 반대 때문에 우리의 개방정책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농업경시세력들의 파렴치한 언어도단일 뿐이다. 적어도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FTA를 추진한다면 이 과정에서 농민들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농민대표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4. 농업 부분을 제외한 협정 체결은 가능

자국에 불리한 산업이나 품목은 제외

농산물 수출대국들도 FTA에서 농산품은 공산품과 달리 특별 취급하여 관세인하품목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비단 농산물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이나 산업은 제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문화산업이 제외되었고, 현재 우리와 협상중인 칠레 역시 캐나다나 멕시코 등과의 FTA에서 일부 품목들을 협정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일본의 사례

일본은 FTA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강력히 시사해 왔다. 이미 캐나다와 호주 등과 FTA 협상을 진행중이나 협상 범위에 농업분야를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못박았다.

일본 통상성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농업 등 무역면에서 심각하게 대립되는 분야가 없는 국가들과 FTA 체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로 서비스분야로만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올해 1월 13일 일본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결과만 봐도 이들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왜 일본은 많은 나라 중에서 싱가포르를 첫번째 상대로 정했을까? 그 의문은 금방 풀린다. 바로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농산물 생산이 거의 없는 나라로서 FTA를 체결해도 일본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은 이번 협정에서 양국은 무관세 교역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중 2,000여개 품목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제외 품목 중 1,500여개가 농수산 부문임이 드러났다.

국내 농업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먼저

이미 위에서도 살펴봤듯이 세계 각국들은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FTA 미체결국이라는 오명을 씻고자 한다면 일본의 사례처럼 산업내 상호보완성이 큰 국가를 선택해 체결하면 그만이다. 굳이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칠레와 FTA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매국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뉴라운드가 출범한 시점에서 칠레와의 FTA는 우리나라의 주요 협상 전략과 상충되는 내용이 많아



▲ FTA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표자대회에 참석한 농민단체장들.

호시탐탐 국내 시장을 노리고 있는 농산물 수출국의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하고 말 것이다. 주요 국가의 FTA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부 산업부문이나 품목을 FTA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정부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이다.

아울러 이제는 개방정책을 통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국내 산업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의 사회 공익적 기능에 대한 환원사업이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각국의 사례들도 비일비재하다. 더구나 과거 한·중 마늘협상 과정에서도 적나라하게 표출되었듯이 산업내 한 부문의 희생을 발판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부분은 해당 피해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부의 재분배라는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모든 대외 협상 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인농연